

무안국제공항, '동네 공항' 전략시킬 것인가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통과 눈앞
무안군 군공항 이전 거부 속
형클어진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민간공항 이전 논의도 진척 없어
"함평, 광주편입"...시·도 불협화음
서남권 거점공항 위상 불투명



"이용객이 없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년 4개월 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7월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정기노선 두 편에 불과해 국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오후 이용객들이 없어 텅빈 무안 국제공항 주차장.

광주군공항 이전에 있어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의 위상 정립까지 지역 내 공항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간공항이 동시 이전하는 대구·경북과 달리 광주·전남은 자칫 서남권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광주민간공항에 이어 군공항이 다른 지역에 들어서 3개의 공항이 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시설인 공항이 1시간 이내 거리에서 각각 분산돼 무안 국제공항의 미래 위상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한 서남권 전반의 미래 발전을 위해 보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4개월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다가 지난 2022년 7월 20일 제주항공의 베트남 다낭 주 2회 운항 정기노선 출발과 함께 재개됐다. 광주 민간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운항했지만, 동남아·일본·중국 등의 비정기 노선과 함께 제주·서울 등 국내 노선을 갖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은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민간공항과 함께 광주, 전북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불가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에 있는 충주공항에 대해 대전·충남이 2007년 국제노선을 신규 개설하는 항공사에 결손금을 보전해주는 '신규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에는 대전시 각계인사가 '청주국제공항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충청권 공동으로 충주공항을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지정받는 등 충청권 내 모든 지자체가 충주국제공항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를 직접 찾아 관광상품과 노선을 유지했으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공항 기능이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3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1000만 평

규모의 복합공항도시를 건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지만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함평이 군공항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민간공항 이전,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강 시장은 당시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와 무안군이 각자의 영역에서 '작은 양보'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빅딜'을 하자"며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국내선과 국제선 통합, 군공항 규모 축소, 소음피해 최소화, 완충지역 7배 확대, 공항도시 1000만 평 광주·전남 공동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이 추진됐으나 2009년 광주 일각에서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된 뒤 이전 논의 자체가 중단됐으며, 민선 7기 들어 다시 광주·전남·무안이 민간공항 이전을 합의했으나 광주의 반대 여론 속에 무산됐다. 이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 함평 등 다른 지역과 협의에 들어가는 등 거시적인 공항 논의 자체가 형클어진 채 소지역주의에 갇혀 지역 미래 발전과는 동떨어져 추진되고 있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호남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

이 군공항 이전지역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래 경쟁력을 오히려 좀 먹는 것"이라며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광주, 전남도, 무안군, 함평군 등 모든 지자체가 서로의 의무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오전 실국장 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최단기간 내 정기노선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고 "공항 재활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선 항공사와 공항 이용자 등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 정기노선 유치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미일 안보회의, 3년 만에 미국서 열린다

'북 미사일 정보 공유' 논의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이번 주 미국에서 3년 만에 열린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3국 국방당국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미국에서 오는 14일(현지시간, 서울시간 15일) 개최된다.

DTT는 2018~2020년 개최되다가,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2020년에 화상으로 열린 DTT에는 한국 국방정책실장,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와 미일은 탄도미사일 정보를 각각 실시간 공유하나 한일 간에는 즉시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공유는 한 쪽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체계로 실시간 공유가 아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3자 회담에서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합 추진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방학 중에도 돌봄과 급식, 통학 버스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제도도 손질한다.

아침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1학급당 돌봄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의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연합뉴스

MZ세대 취업 최대 조건은 '워라밸' ▶2면

굿모닝 예향-동명동 여행자의집·민간정원▶18·19면



KIA, 한화·키움 상대 컨디션 끌어올리기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입니다.

간호법은 2022년 4월 27일,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공약위키

간호 개선방안

- 1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 2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
- 3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 4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대비 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추진
- 5 ICT기반 일차의료·장기요양 방문간호 연계체계 구축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국제라이온스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약사협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권익포럼, 재향군인회여성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신장애인권대, 청년디딤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등 1,300여 단체(가나다 순)